

## GLOBAL TREND

# 세계지방자치동향

### 독일

- ▶ 독일의 디지털 AI 혁신 프로젝트 - 시민 코딩(Civic Coding)

### 미국

- ▶ 디트로이트 권역의 보조교통시스템 기술혁신 프로젝트 (Ride Paratransit Project in Southeast Michigan, Detroit, MI)
- ▶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 'Los Angeles GeoHub'와 'Data Analysis Solutions for Homelessness (DASH) platform'

### 일본

- ▶ 일본 지방대학의 반도체 연구·교육 거점 확보 및 인재육성

### 한국

- ▶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갈림길에 서있는 'AI법'
- ▶ 부산광역시 도로파손 데이터 관리 고도화 프로그램



#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갈림길에 서있는 '시법'

##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배경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후 AI)은 인간의 지적능력과 같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리적 판단과 함께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컴퓨터 혹은 기계로 구현하는 기술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OpenAI가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를 2022년 11월 최초 공개한 이후, Google의 Gemini(구 Bard)가 2023년 5월 10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강전영 외, 2023)
  - 이러한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광범위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추론하는 기술임(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2023)
- 문재인 정부는 ① (AI 기반)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② (AI 활용)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③ (선제적 사회변화 대응) 사람 중심의 AI 구현의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로 구성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53회 국무회의(2019.12.17.)에 발표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에 인간성(Humanity)을 우선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윤석열 정부에선 '24년도 9,090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하며,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최근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24년도 335억 원)를 통해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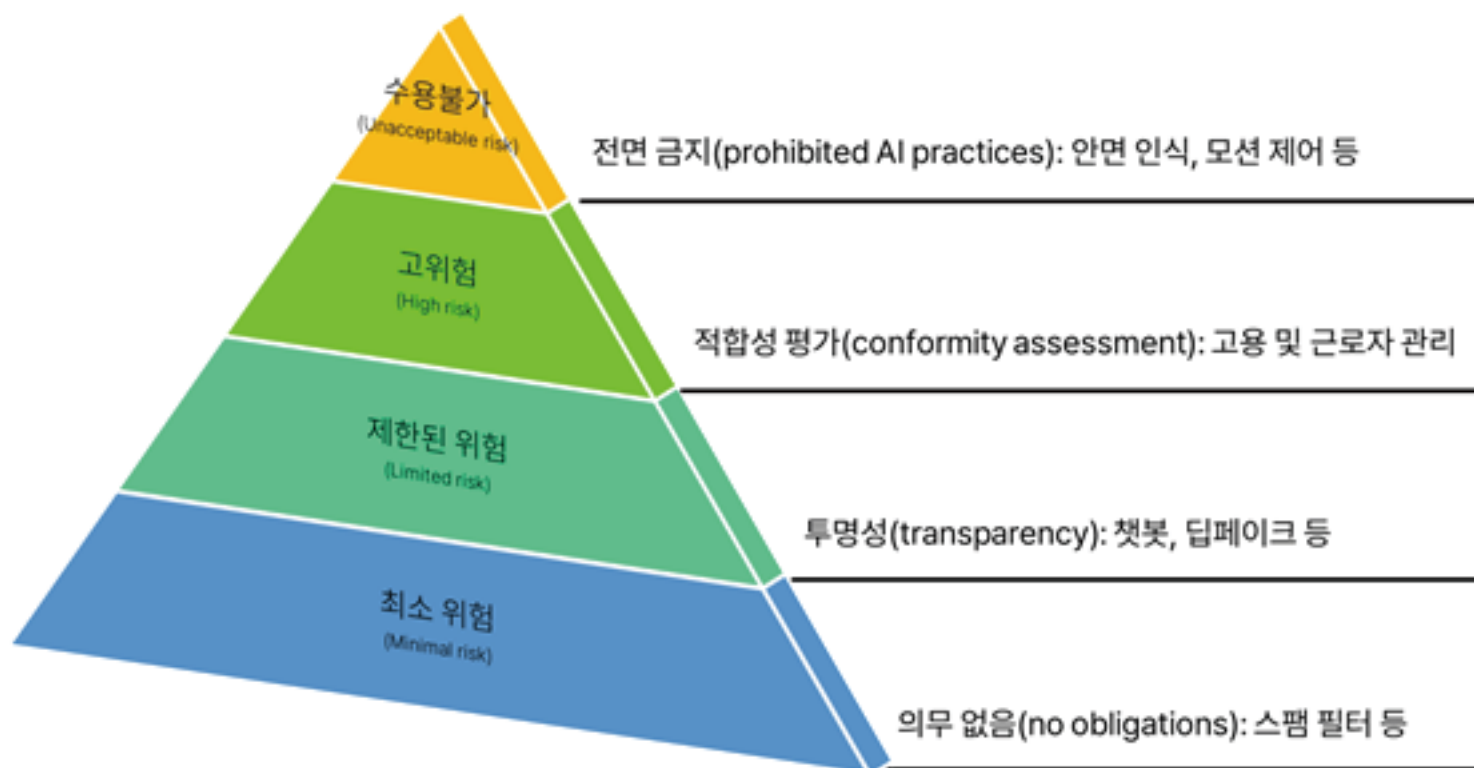
## 인공지능 법적 기반 마련

- AI 국가전략 마련 이후,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AI 기술이 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②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현안 해소, 그리고 ③ 고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반면에, ①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②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철저한 대비가 또한 강조되었음 (관계부처합동, 2020)
- 생성형 AI 등장 이후, 초거대 AI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에 따라 법제 정비 논의를 시작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개의 분파위원회로 확대 구성되어, AI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제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법제 정비를 진행하였음
- 또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을 통해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지원 수립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AI 일상화를 위한 민관산학 공동 사업 발굴과 함께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을 기대함
  - 또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산하 법·제도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세계 AI 규제 동향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 구체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인공지능 관련 주요 입법동향

- 제21대 국회(2020~2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AI 산업 육성 관련 생태계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통칭 AI 기본법)」을 의결함(2023.02.14.)
  -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 구성(안 제6조), 인공지능 관련 시책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센터 설립(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법안 내용 중 우선허용·사후규제(안 제11조)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정보 생산,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방지 문제와 연관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관련 논의의 시발점은 해당 조항에서의 고위험 AI 범위의 모호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용자와 정보 주체의 권리침해 범위 및 규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이 주로 지적되었음(국가인권위원회, 2023)

- 비판이 제기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한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최근 유럽연합 AI 규제법(P9\_TA(2024)0138)에서 위험 분류 체계를 ① 최소 위험, ② 제한된 위험, ③ 고위험, ④ 수용 불가로 구분하고, 고위험 이상에서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제지침을 마련하였음(한국법제연구원, 2024)
  - 이에 14개 시민사회단체에선 유럽연합 AI 규제법에서 분류한 고위험 영역(그림 1 참조)에 해당하는 영역(예: 전자상거래 혹은 생체정보 기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금지와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제시민사회단체, 202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법의 인공지능 위험 분류체계]

- 또한, AI 관련 주요 법률안에선 ① AI 윤리기준, ② 신뢰성 강화, ③ 고위험 AI 규제 그리고 ④ 저작권 및 유출방지 마련과 같은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기되었음(표 1 참조)

[표 1. 인공지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법안명	발의일	주요내용	심의결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18726)	2022.12.07	통칭 'AI 기본법'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01)	2023.02.14.	AI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방통위에 신고 의무	임기만료폐기
인공지능책임법 (20353)	2023.02.28.	AI 사업자 이행 의무 고지, 특히 고위험 AI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130)	2023.02.20.	관련 회사의 알고리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고리즘 제출을 요구	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20898, 21075, 20799)	2023.03.27 등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 활용 시 피채용인에게 사전고지 의무	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22180)	2023.05.22.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음을 표기	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개정안 (22537)	2023.06.08.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명시적 기준 마련, 추후 AI 기술 저작물 활용 허용범위와 저작권 침해 경계를 규정	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22569)	2023.06.12.	AI를 이용하여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운동 활용금지, 논평과 보도의 기초자료 활용을 제한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730)	2023.06.19.	AI 기술을 이용한 정보제공 및 정보제공 매개하는 자를 명시	임기만료폐기

주: 심의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임(2024.06.07. 기준).  
 자료: 법무법인(유)세종(2023) 재구성.

## 시사점

- AI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AI 기술 발전과 신산업 진흥을 위해선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폐기된 AI 기본법 발의의 주요 목적은 산업 진흥과 자율 규제 조화를 원칙으로 AI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 특히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와 같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 AI 혁신 방향 설정 및 활용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신뢰성, 투명성, 안전성 기반이 보장된 규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AI 윤리 원칙 마련이 필수적이며, 특히 (고위험) AI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제를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강전영, 김민준, 이원도. (202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살펴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한계점: ChatGPT와 Bard를 활용하여. 「국토지리학회지」, 57(4): 477-90. <https://doi.org/10.22905/kaopqj.2023.57.4.9>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번역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LLM(거대 언어모델) 활용 방식 및 주요 이슈 분석. 「IT & Future Strategy」, 5: 1-19.
- 법무법인(유)세종. (2023).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45>, 2023.06.29. 등록).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3 March 202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COM(2021)0206 - C9-0146/2021 - 2021/0106(CO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발표. (보도자료 2019.12.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보도자료 2020.1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법제정비 추진. (보도자료 2023.08.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디지털 대항해 시대, 글로벌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추진 (보도자료 2023.09.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보도자료 2024.03.28).
- 관계부처 합동. (2020).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보도자료 2024.12.24.).
-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공지능 법률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보도자료 2023.08.24.).

- 대통령실. (2024).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보도자료 2024.05.21.).
- 제시민사회단체. (2024).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해야 (보도자료 2024.05.14.).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

**이 원 도** 부연구위원

wondo.lee@krii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